

민주, 김현·진선미 특위 배제 놓고 자중지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당 지도부 “국조 공전 안돼” 사퇴 가닥

특위 위원들 “강제 제척 안된다” 반발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지도부는 1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두 의원의 사퇴로 갈피를 잡았으나 특위 측이 “강제 사퇴나 사보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의 요구는 부당하지만 국조가 공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국조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자진 사퇴된, 사보임이든, 어떤 식으로든 오늘 내일 결판이 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새누리당 입장이 강경하니 교체를 해서라도 국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두 의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두 분이 잘못이 있어서 아니라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할 상황이니 지도부로서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국조 무력화 공작에 달려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조를 하는 게 제1야당에게 책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조 진행을 위한 두 의원의 불가피성을 암시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정조사가 더 이상 공전돼선 곤란하다.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김, 진 의원에 대한 제척이나 사보임은 결정되지 않았다. 강제 제척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두 의원의 (거취) 문제는 지도부로부터 특위가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특위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특위는 의리로서 두 명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진 의원에 대해 “뭐가 옳은지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도 “합부로 (제척을)결정하지는 못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지도부도 잘 알고 있고 특위 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두 의원의 국조 배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국조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중진의원 회의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 나간 건 추측성·개인적 발언이다. 이해해주고 취소하는 것으로 해달라”며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열람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을 작성한 뒤 정리하고 있다. /연습스

민주, 잇단 ‘막말 파문’ 골머리

청와대 ‘박대통령 정통성 부정’ 규정 강한 반발

민주당이 계속되는 당내 인사들의 사려깊지 못한 ‘막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관심이 국정원 대선개입에서 ‘발인의 적절성’ 여부로 모아지면서 진선이 흐트러지게 된 때문이다.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이 가까스로 수습되는 가 싶더니 15일엔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세종시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행한 발언

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지칭하며 “국정원을 비호하면 당선무효 주장세력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막말 자체 요청에도 이 같은 험한 발언이 이어지는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친노 진영이 현 국면을 주도하면서 김한길·전병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의 ‘영’이 서지 않은 것이다. 친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의 전남 공동어로

구역 지도 공개도 원내 지도부는 만류했으나 뜻을 꺾지 못했다.

이에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또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비정당적 국정

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의 막말 파문을 수습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민주당 일각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 일각의 발언을 현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언행으로 규정, 민주당에 대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정통성을 계속 부인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지도부 선출·당명 개정

진보정의당, 투표 시작

진보정의당은 15일 새 지도부 선출과 당명 개정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20일까지 온라인·현장·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21일 경기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당대표 후보로는 전호선 최고위원이 단독출마 했다.

총 3명을 선출하는 부대표 선거에는 김범기 고양지역 부위원장, 김병미 부산시장 부위원장, 김형택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문정은 청년위원장, 이정미 최고위원 등 5명이 출마했다. /연습스

선관위, ‘공무원 줄서기’ 철폐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첫 구성

내부고발자 보호 위해 다른 부처 희망택 전보 지원도

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막고, 이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를 희망할 경우 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고, 소속 기관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조사,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요청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이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부고발자 공무원이 다른 기관 근무를 원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와 협의해 다른 지

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줌으로써 신분 보호를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처음으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사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리베이트·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과 도중에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 언론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525건을 포함해 총 55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제공이 고발 23건, 수사의뢰 9건, 경고 등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 배부·불법시설물 설치의 경우 각각 63건, 68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연습스

이낙연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 기업 세금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거나 이미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이미 특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사업의 시행자나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시네마 분양완료! 롯데시네마 2003년 9월 1일 오픈예정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분양완료! 롯데시네마 200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 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